

## [ 종합·해설 ]

## ■盧대통령 '삼성 특검법' 수용 배경은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보좌진들이 배석한 가운데 '삼성비자금 특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차피 재의결..." 정면 돌파**

거부권 행사시 '青-삼성 유착설' 등 역풍 우려  
청와대 "꺼리고 두려워 할 것 아무것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된 지 단 하루 만인 27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전격적인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체하지 않고 수용한 것이다.

당초 청와대가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 및 특검 권한 남용의 이유를 들어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 대통령 특유의 정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이 입장 선포한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에 대한 여론의 흐름과 국회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법리'와 '원칙'을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데다 임기 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동력이 충분히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되돌아온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거부권을 밀어붙였다가는 항간에 떠들고 있는 '청와대-삼성 유착설'과 함께 '당선 축하금 수사를 피하려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삼성 비자금 특검법' 수용으로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검법 수용 여부 판단에서 뭘 꺼리고 두려워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측근들의 관련 가능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용철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폭로가 의심받게 된 계기인데 그게 청와대에 보편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않는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에 큰소리하다 구겨졌지만 또 구겨지더라도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1년 2월 21일 체결된 영문 주식매입계약서를 보면 AM파스 회장은 가공인물"이다. 김씨 측이 이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증거로 들이댄 이면계약서('주식 매매계약서')에 찍힌 이 후보의 도장이 금융 감독위원회에 제출한 EBK증권중개의 회사 설립신고서나 발기인회의 의사록, 지분인수 및 출자 확인서, 자금조달방법 확인서 등에 무더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LKe뱅크 인감관리대장에

**盧 "당선 축하금 근거 뭐냐...삼성 특검은 대통령 흔들기"**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삼성비자금 특검법' 수사대상에 이른 바 '당선축하금'이 포함된 대 대해 "수사의 단서는 의혹의 단서보다 훨씬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의혹의 단서도 의문스러운데 하물며 수사의 단서로 삼겠다는 것은 대통령 흔들기"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선축하금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의혹의 근거가 무엇이나. 한나라당 홍준표 안상수씨가 말했는데 밭언내용이 구체성이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고소하기 위해 혹시 구체성이 있는가 싶어 밭언

내용을 조사했는데 고소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성도 없고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축하금'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그동안 실질적 수사를 많이 받았다.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많이 있었고 많이 받았다"며 "그동안 많이 받아왔으니까 똑같이 법대로, 양심껏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특검이 순수하게 삼성 특검이라면 대통령 흔들기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당선축하금이 특검 항목에 있으니까 대통령 흔들기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檢, 이명박 소환? 아니면 서면 조사?**

## 명쾌한 '무혐의' 아니라면 조사 후 처리 원칙

## 직접 확인·설명 필요해도 조사 사실상 어려워

등이 모두 위조됐다"거나 "이 후보가 맡긴 막도장을 김씨 측이 일의로 찍은 것"이라며 이 후보 연루 의혹을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종결 처리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검찰 주변에서 일부 나오고 있다.

김씨 측이 '이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증거로 들이댄 이면계약서('주식 매매계약서')에 찍힌 이 후보의 도장이 금융 감독위원회에 제출한 EBK증권중개의 회사 설립신고서나 발기인회의 의사록, 지분인수 및 출자 확인서, 자금조달방법 확인서 등에 무더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LKe뱅크 인감관리대장에 등이 모두 위조됐다"거나 "이 후보가 맡긴 막도장을 김씨 측이 일의로 찍은 것"이라며 이 후보 연루 의혹을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종결 처리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검찰 주변에서 일부 나오고 있다.

김씨 측이 '이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증거로 들이댄 이면계약서('주식 매매계약서')에 찍힌 이 후보의 도장이 금융 감독위원회에 제출한 EBK증권중개의 회사 설립신고서나 발기인회의 의사록, 지분인수 및 출자 확인서, 자금조달방법 확인서 등에 무더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LKe뱅크 인감관리대장에

복록 있다.

김씨 변호인인 오재원 변호사는 "검찰이 정밀 감정 중이어서 결과를 봄에 알겠지만 대장에 있는 도장과 '한글 이면계약서'의 도장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후보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김씨에게 위임하면서 도장을 맡겼다면 김씨가 계약서 위조 등을 위해 이 도장을 일의로 사용한 것인지, 이 후보와의 합의 하에 찍은 것인지, 도장을 이 후보가 직접 찍었는지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후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김씨가 이 후보의 명성을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이 후보의 인감과 도장, 친필사인까지 전부 도용해 모든 서류 등을 위조하고 조작한 것이 명쾌하게 드러난다면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도 '무혐의'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사 직접 조사 필요성이 있더라도 한나라당 공식 대선주자가 된 이 후보를 검찰청사에 부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연합뉴스

난 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도장이 찍혀 있다.

정 의원은 "기존에 알려진 영문 '주식양도 약수계약서'에 적힌 AM파스의 서명과 오늘 제시한 계약서의 서명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보면 AM파스 회장이 가공의 인물이란 점이 확실하다"며 "계약서의 서명 당시 자인 이 후보가 이를 모를 리 없어 김경준과 사건을 공모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이 후보가 애초 AM파스에 넘겼던 LKe뱅크 주식은 33만3천333주였는데 이 계약서에 따라 돌려받은 건 32만1천270주밖에 안 되고 지급한 돈도 1억8천만원 가량 적다"며 "결국 이 거래는 e-Bank Korea라는 그룹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가장 매력에 불과한 것이라니란 의혹을 펼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Ke뱅크 투자 AM파스 회장은 가공인물"**

## 신당, 한글 주식양도약수계약서 추가 공개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 진실규명 대책단'은 27일 이명박 후보와 AM파스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한글로 된 '주식양도 약수계약서'를 추가로 제시했다.

대책단 공동단장 정봉주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계약서는 이명박 후보에게 LKe뱅크 주식 32만1천270주를 주당 5천원씩, 총 48억1천905만원에 다시 넘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A4용지 한장 짜리 계약서에는 2001년 6월 13일 AM파스가 이명박 후보에게 LKe뱅크 주식 32만1천270주를 주당 5천원씩, 총 48억1천905만원에 다시 넘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AM파스 회사명 옆에는 'A.M. Pappas'

야서 2조3항을 보면 EBK 설립이 6개월 이내에 무산되며 이 후보 측이 AM파스에 주식을 넘기는 기준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A4용지 한장 짜리 계약서에는 2001년 6월 13일 AM파스가 이명박 후보에게 LKe뱅크 주식 32만1천270주를 주당 5천원씩, 총 48억1천905만원에 다시 넘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이 제시한 A4용지 한장 짜리 계약서에는 2001년 6월 13일 AM파스가 이명박 후보에게 LKe뱅크 주식 32만1천270주를 주당 5천원씩, 총 48억1천905만원에 다시 넘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AM파스 회사명 옆에는 'A.M. Pappas'

**'국민노망' 발언·'나쁜 대통령' 광고 등 맹공**

## 한나라, 신당 의원들 무더기 형사고발

한나라당은 선거운동 첫 날인 27일 대통령민주신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당 지도부는 신당 김근태 이해찬 공동 선대위원장의 전날 '국민노망', '이명박 후보의 모든 게 가짜' 발언을 "국민모욕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두 사람의 의원직 사퇴촉구와 함께 국회 윤리위 제소 및 형사고발 침장을 밝히는 등 강경대응했다.

특히 이 후보 부인의 '호화시계' 의혹을 제기한 신당 김현미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기호 2번 나쁜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신당 신문광고도 선관위에 고발키로 하는 등 '줄소송'을 예고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선거운동 초반부터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과 함께 'BBK 정국'으로 인한 수세국면을 탈피해 보겠다

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는 선대위 총괄본부장인 이방호 사무총장을 비롯, 주요 당직자 및 의원들이 득표활동을 위해 하방(下放)하면서 다소 쟁쟁했으나 신당 성토 열기 만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신당 선대위 원장단 회의에서 정 후보는 이명박 후보 비방발언으로 인사말을 시작하고, 김근태 이해찬 위원장은 이 후보의 높은 지지를 을 거론하며 각각 '국민이 노망든 것 아닌가 걱정된다', '대한민국이 가짜가 된다'는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면서 "국민을 모욕하고 유권자를 능멸하는 안하무인 격 밭언"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